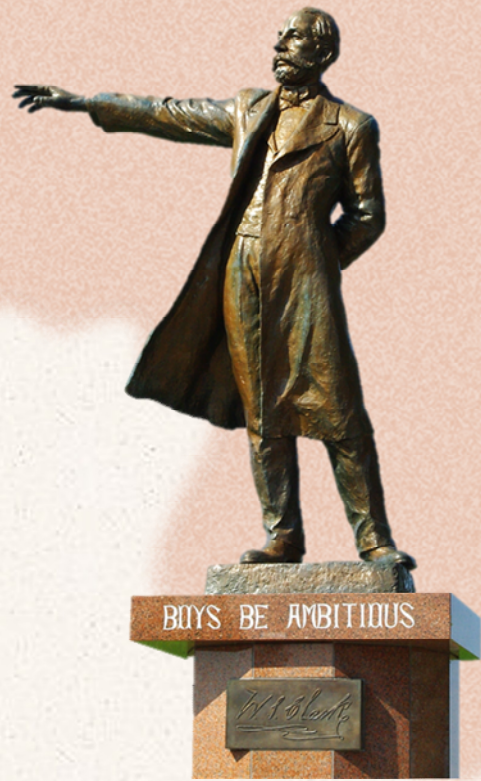


웹진
동동

東動



‘동동(東動)’의 첫걸음에 부쳐

김백영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인구이동에서 모빌리티로: 방법론적 검토

김이선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두고 온 것들에 대하여: 어느 청년 정당 활동가의 삶과 정치 모빌리티

김민재 | 정치싱크탱크 VALID 디지털전환팀 활동가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청년모빌리티연구사업단

‘동동(東動)’의 첫걸음에 부쳐

김백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Boys, be ambitious!”

미국의 메사추세츠 농업대학의 총장으로 봉직하다가 1876년 삿포로농학교(현 홋카이도대학) 초대 교두(敎頭)로 부임하여 홋카이도에 선진 낙농업을 정착시킨 윌리엄 S. 클라크(1826-1886)가 남긴 말이다. ‘근대’와 ‘문명’, ‘진보’와 ‘발전’의 길로 국가와 민족을 인도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당대 동아시아 청년들의 가슴을 충만케 했던 메시지로 이보다 강력한 언명이 또 있으랴.

근대전환기 중국, 일본, 한국은 각각 반(半)식민화, 제국화, 식민화라는 운명의 갈림길을 경험했고, 지배와 피지배의 악연으로 얽히고설킨 역사를 나눠 가졌다. 이 운명의 실타래가 한바탕 거대한 전쟁의 참극과 혁명의 아수라장을 거쳐 20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냉전체제로 안정화되자, 이들 세 나라는 (나라마다 시기와 양상은 사뭇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경이로운 ‘압축근대’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세 나라의 ‘진보’와 ‘발전’을 향한 도정에서 클라크 박사의 가르침은 각국 청년들에게 금과옥조가 되었고, 세상은 그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피투(被投)’ 연구: ‘포스트 압축근대’ 시대 청년의 삶

그러나 ‘포스트 압축근대’ 국면에 접어든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는 초저출산과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삶이라는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과거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한강의 기적’(한국), ‘1억 총중류’(일본), ‘G2 부상’(중국)이라는 압축근대화의 성공 서사를 체감하기 어렵게 되었다. 각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한 기회를 향유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성장 중심 패러다임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 한·중·일 청년세대의 삶은 사회적 상승이동 사다리의 붕괴, 표준적 생애 모델의 와해, 극심한 경쟁체제와 같은 악조건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다.¹⁾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시공간적 조건 속에 내던져진 존재임을 강조하고자 ‘피투(被投, thrownness, Geworfenheit)’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개념을 오늘날 동북아시아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구조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에 대해 자세히는 김란, 「동북아시아 청년세대의 피투와 기투: 움직일 것이냐, 멈출 것이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온라인 매거진 <아아> 2026년 3호(<https://snuacwebzine.snu.ac.kr/?p=10818>) 참조.

‘포스트 압축근대’ 시대 한·중·일 청년세대가 공통적으로 처한 피투적 상황은 각국에서 청년을 표상하는 지배적 담론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88만원 세대’에서 시작되어 ‘N포세대’를 거쳐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으로 점점 더 절망적으로 악화되어 간 한국의 사례,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배경으로 등장한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거쳐 ‘사토리 세대(悟り世代)’라는 체념의 문화로 이어진 일본의 사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도성장이 둔화되면서 ‘개미족(蟻族)’에서 ‘탕핑(躺平)’ 세대로 변모한 중국의 사례가 그러하다.

‘기투(企投)’ 연구: 모빌리티 실천과 동북아시아의 미래

하지만 절망적인 피투적 조건 속에서도 청년들의 삶과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북아시아 청년 개개인들이 처한 다양한 피투적 조건 속에서 다종다기한 기투적 실천이 현실로서 전개된다. ‘기투(企投, projection, Entwurf)’란 하이데거 철학에서 ‘피투’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응전으로서 주체의 실존적 선택이자 미래를 향한 기획을 뜻한다. 기투적 실천은 다양한 변이를 띠면서 나타나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행위의 주체성과 이동의 활동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주목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동적/능동적 모빌리티, 피동적/능동적 임모빌리티가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하는 기투의 사례는 훨씬 더 입체적인 분석틀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별 실천들의 총합으로 나타나는 각국의 사회적 모빌리티 양상은 수도권 일극화(한국), 수도권 집중과 지방 정주(일본), 2·3선 도시로의 역방향 이동(중국) 등과 같이 다양한 인구이동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히키코모리나 ‘파이어족(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과 같은 임모빌리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행성적 도시화’의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의 모빌리티 양상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이촌향도’ 현상과는 시공간적 차원을 달리한다. 1990년대부터 몰아닥친 탈냉전-세계화-정보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초국경적인 정보-물류-인간의 모빌리티는 거대한 복잡계를 구성하면서 이동성이 극대화된 21세기를 열었다. 여기에는 국민국가 내에서의 트랜스로컬한(trans-local) 이동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내셔널한(trans-national) 이동도 포함된다. 교육, 취업, 결혼, 문화 등 다양한 동기와 유인을 좇아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동북아시아 청년세대의 (임)모빌리티 실천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피투적 조건에 대한 어떤 기투적 실천의 산물인가? 그것은 동북아시아 각 곳의 도시와 마을과 거리에서 어떤 새로운 만남과 교류, 촉발과 연대를 창출하고 있는가?

미생, 청보리, 트랜짓 그리고 동동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결성된 본 연구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가을 공식 출범했다. 공동연구의 주제는 “동북아시아 청년 모빌리티 연구: ‘피투(thrownness)’의 구조와 ‘기투(projection)’의 실천에 대한 다중스케일 분석”으로, 동북아시아 각국의 사회변동에 대한 중장기적 조망 속에서 발전주의·압축근대 시기와 포스트 발전주의·포스트 압축

근대 시기를 오가며 청년세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 총 6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트 압축근대’ 시기 동북아 각 지역 청년들의 삶을 (임)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연구, 다학제적 협업, 국제비교연구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동북아 각지에서 분투하거나 시름하고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과 호흡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긴요할 것이다. 이 웹진은 동북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삶의 모험과 도전, 좌절과 망설임, 머무름과 떠남의 장면장면들을 담아내고 보듬고 함께 나누기 위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동동(東動)’이라는 명칭은 웹진의 이러한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호를 찾기 위해 사업단 참여연구진 모두에게 아이디어를 구해 공모한 결과물이다. 공모된 후보작으로는 ‘P2G2(被投/企投; 피투와 기투)’, ‘미생(未生; 바둑 용어에서 유래, 아직 완생(完生)하지 못함)’, ‘정보리(아직 익지 않은 곡물이지만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상태를 의미)’, ‘Transit(이동의 과정,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환승 상태를 의미)’ 등이 제안되었는데,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동동(東動)’이 선정되었다. ‘동아시아(東)’ 청년의 ‘모빌리티(動)’를 이보다 더 귀엽고 생동감 넘치고 발랄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한여름 날 ‘아아’에 얼음 동동 띄워 즐기듯 ‘동동’을 애독해주시고 즐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인구이동에서 모빌리티로: 방법론적 검토

김이선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방법론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를 제시하는 것으로 다뤄지지만,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연구자를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 이르게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러한 정의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 세상은 어떤 모양인가? 그리고 세상을 그러한 형태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게 되는가. 어느 연구에서나 발견되는 질문이지만, 이 글은 오늘날 인구이동을 다루는 연구를 통해 방법론은 이론의 문제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방법론을 요청하게 된다는 고민을 풀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을 ‘설명 대상으로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를 특정한 관점과 방법으로 다루는 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인구학 역시 인구라는 개념을 특정한 관점으로 구성하고 분석하는 고유한 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과학적 지식을 합의와 자원배분의 기초로 삼는 인구정책은 인구학 방법론이 전제하는 세계관의 영향력 아래 전개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인구는 “인간집단의 계수(計數)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통상 정의될 수 있다. 이미 이 정의는 인구를 다루는 학문의 주춧돌을 특정한 형태로 틀지운다. 이 글에서 짚고자 하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인구는 계수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숫자로 헤아린 결과라는 특징을 가진다. 삶과 세계를 표현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인구라는 개념은 ‘몇 명의 사람들’이라는 집계된 숫자의 형식을 택한다. 둘째, ‘구획된 일정한 지역’이라는 공간이 설정돼 있다. 이 특징은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경계를 넘는 움직임을 이동으로 인식하는 ‘인구이동’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셋째, 거주라는 특징이다. 인구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며, 그 생활의 시간적 길이는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인구 개념의 이러한 특징은 미셸 푸코가〈안전, 영토, 인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대 사회의 형성 및 통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푸코는 오늘날과 같이 인구를 집계하고 관리하는 접근은 17-18세기 권력의 방식과 함께 시작됐다고 논의한다. 한국 인구정책의 역사도 이러한 계보 속에서 독해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 6.3명인 1960년대의 〈가족계획사업〉과 1973년 〈모자보건법〉으로부터 합계출산율 0.7명인 2020년대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제4차)〉의 시대까지, 언제나 인구는 국가 통치의 점점 목록에서 최상단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국가 성장, 사회 번영의 원동력으로서 인구를 관리하는 관점, 그 과정에서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매개변수로 호명하는 인구정책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절벽의 상황에 도달했다. 여성·가

족 연구자들은 사태의 이러한 진행은 인구정책의 실패이기보다는 정책에 내포된 성장과 통치 패러다임이 방해 요인 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점을 상기해주고 있다(배은경 2021, 박경숙 외 2023, 조은주 2018).

일종의 파국 혹은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인구-통치의 패러다임은 또 다른 대응 방안으로서 인구이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고, 각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예측하면서, 인구의 유출입과 이동의 방향을 조절하는 인구재배치 정책이 그것이다. 인구 개념에 이미 ‘지역 구획’이라는 공간적 차원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인구재배치 정책과 인구재생산 정책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다면체의 서로 다른 측면이다. 인구재배치 정책은 인구재생산 정책과 상동(相同)으로 인구의 질과 경제적 순환,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지향한다.

인구재생산 정책과 재배치 정책의 상동성은 2010년대 인구위기 담론을 통과하며 심화된 2020년대 인구정책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 가족 중심의 언어로 서술되는 재생산정책과 경제, 개발 중심의 언어로 서술되는 재배치 정책은 계열을 달리하는 하위분과이지만, 최근 논의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은 여성·가족·생애·돌봄의 전통적 주제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주거환경·지역상생 논의를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귀농귀촌프로그램’을 세부 추진과제로 수록하고 있다(pp.176-177). 한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에는 지역인재·교육·생활환경이 주요 주제로 설정되면서 ‘지방이주’, ‘귀농귀촌’, ‘체류형 생활인구’ 등 농촌 이주 및 연관 담론들이 새로운 모델로 조명되고 있다(pp.24-25). 인구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사회적 위기 속에서 재생산정책과 재배치 정책이 ‘농촌 이주’라는 주제로 접합되는 양상이다.

‘농촌 이주’가 이렇게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주목받게 된 맥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겠으나, 무엇보다 2010년대에 크게 성장한 이도향촌(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 농촌의 위기는 오랜 기원을 가지는 바, 지역 상황의 위급성만으로는 농촌 이주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를 해명하기 어렵다. 일련의 실천들이 2010년대에 잠재력을 담지한 인구이동으로 감지되면서 농촌 이주가 정책 모델로 주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널리 회자되는 흥동-장곡 마을이나 지리산 인드라마공동체, 양양 서평마을 등은 관 주도의 정책적 결과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천 속에서 형성된 곳들이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그 다음 이주를 불러오면서, 이들 사례가 지역의 인구정책 담론의 ‘자원’으로 해석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서울 혹은 대도시에서 지역의 소도시, 농산어촌으로 이주했을까? 2010년대 이러한 실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는 데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동했는가?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이들의 이주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궤적을 따라가고자 하면, 곧 인구이동의 틀로는 이들의 이동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들의 서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자신들의 이동을 도시와 농촌,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하나의 삶의 방식에서 다른 방

식, 예전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김이선 2022). 전통적 귀농귀촌 서사가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와 자연과 공동체적 삶으로의 회귀'였다면, 2010년대 농촌 이주 서사는 사뭇 다르다. 또한 오랜 정주 속에 형성된 공동체의 공간이었던 농촌이 변화와 실험, 삶의 감각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의미화되면서 '거주'보다는 경험, 연결, 리듬과 같은 다양한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지역에 정착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설새없이 오가고, 여러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고, 다양한 방식의 생활을 연결하는 식의 활동들이 관찰된다.

이 같은 양상은 이들의 이주와 그 결과를 인구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국가-지역 경계가 존재하고, 그 경계를 넘어 거주하는 인간들로서의 인구이동이라는 틀에서 이들과 이들의 이동은 미끄러지고 흩어진다. 인구재생산 정책과 재배치 정책 모두에서 귀농귀촌이 등장하지만, 귀농귀촌정책 지원을 둘러싼 지역 내·외부의 갈등과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분석틀로서의 인구이동 개념에 좀더 적극적으로 연결해보고자 한다. 2010년대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을 탐색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미와 실천들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이미 견고하게 구성돼 있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거부하거나/버티지 못하고, 새로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실험적 도전의 성격을 띤다. 이들이 벗어나고자 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좌표 체계는 출생연도, 생산과 재생산, 거주지와 거주지 간 이동으로 사람들을 인식하고 포섭하는—즉 '인구'를 구성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이 체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좌표상의 한 점으로 존재하는 것, 그 점들의 집합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인구학적 지표로 나타난 것이 초저출생과 지역인구 위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좌표 체계에 찍혀있는 점이자, 인구총합을 이루는 한 명'이라는 위치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농촌 이주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는 이동, 직업 세계에서 부업과 N잡러, 본캐와 n번째 부캐의 정체성, 온/오프라인의 동시 접속 실천을 통해 모든 곳에 존재하기(혹은 흡사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볍게 존재하기), 극단적으로 꼼짝도 하지 않음을 통해 사회와 관계망 속에서 비가시화되기... '인구'로서가 아닌 삶을 찾아가는 이들의 움직임이 인구학의 분석틀로 적절하게 포착되지 않는 것은 응당의 결과일 것이다.

이제 이 글의 시작점을 다시 상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방법론은 연구대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패러다임적으로 작동하며 이론적 가능성과 한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농촌 이주 현상은 새로운 이론적·방법론적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일군의 연구자들은 그 가능성을 모빌리티(mobilities) 이론의 우산 아래 탐색하고 있다. 모빌리티 이론은 각양각색의 이동을 맥락적으로 읽어내고 사유하며, 그것이 생산-재생산되는 방식 속에서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Sheller and Urry 2006). '주어진 구획 경계를 넘는 이동 인구'는 모빌리티 연구 속에서 '이동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공간, 세계를 형성해 가는 모종의 존재'로 재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한다. 여전히 이 사회의 구조는 인구 좌표 체계 위에 작동하고 있기에, 무수한 이동과 이동의 재현을 포착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 패러다임과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오갈 수 있는 이론적·방법론적 경로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이도향촌 이동에서도 전통적 이주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과 인구정책에 조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함께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패러다임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사실 이 글은 그 교량의 설계도, 아니 윤곽 정도라도 논하고자 했으나, 목적 달성의 어려움을 다시금 확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글로 수정한 결과다. 동북아 청년 모빌리티연구사업단을 통해 사회학-인구학-지리학-인문학- 또는 한국-중국-일본- 사회 등 여러 경계를 넘게 될 이 글의 모빌리티에 희망을 걸어본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이선 2022. “2010년대 도-농 이주민의 인식과 경험 속에 나타나는 농촌 공간의 재구성.” 〈문화와 사회〉 30(3): 267-324.
- 박경숙, 이상직, 육영우. 2023. “발전주의 인구레짐의 확산과 한계: 세계 출산율 추이 분석, 1950-2020년.” 〈한국사회학〉 57(4): 1-47.
- 배은경. 2021. “‘저출생’의문제제기를 통해 본 한국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재생산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검토.” 〈페미니즘연구〉 21(2): 137-186.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해외문헌〉

- 미셸 푸코. 2011.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움김. 난장.
- Sheller, Mimi, and John Urry. 2006. “The new mobilities paradigm.”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207-226.

〈정부간행물〉

- 정부간행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 정부간행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두고 온 것들에 대하여: 어느 청년 정당 활동가의 삶과 정치 모빌리티

김민재

정치싱크탱크 VALID 디지털전환팀 활동가

오랫동안 머물던 곳을 떠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두고 온다. 그 '두고 온 것들'은 물성을 가진 어떠한 존재일 수도 있고, 물성은 없지만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나 이런 저런 사건에 대한 기억들일 수도 있다. 또 사건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날 수 없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떠나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두고 온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두고 왔음에도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두고 온 것들은 '두고 왔지만 실은 두고 온 것이 아닌', 또는 '함께 떠나왔지만 사실은 두고 온', 참으로 애매모호한 존재다.

이 글은 '그곳'을 떠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을 떠나며 두고 온 것들의 이야기다. 여기쯤에서 아마 눈치를 챘을 테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그곳'은 제도권 정치이다. 나는 7년간 정당 활동가로 살아왔다. 지금은 정당 밖에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글을 쓴다. 정당 활동가로서 나는 무엇을 했고, 왜 떠났는가? 나는 무엇을 두고 왔는가? 또 나의 활동은 어떤 길을 거쳐 현재로 흘러 왔는가? 이 글은 정당 활동가였던 나의 삶과 정치 모빌리티에 대한 기록이다.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내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2016년 말~2017년 초순 경부터였다.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가 맞물렸던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정권교체기가 늘 그렇듯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개혁 요구가 물밀듯이 쏟아졌다. 이 시기에 나는 '18세 참정권 운동'을 했다. 참여하게 된 동기는 그리 거창하지는 않았다. 생일이 늦은 나는 2017년 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투표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뽑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내 인생 첫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내가 했던 활동은 단순했다. 온라인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서명을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실행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서명지라는 것을 만들었다.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형식으

로 틀을 짤 것인지 고민해서 서명지를 완성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를 부탁했다. 그렇게 모은 서명 수는 고작 50여 명. 서명운동치고는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다.

나름 어렵게 모은, ‘작고 소중한’ 서명용지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고민 끝에 정의당과 민주당 지역 당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당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서명을 전달했다. 그리고 도당 관계자에게 서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도당 관계자들께선 나의 말을 꽤나 진지하게 들어 주셨던 것 같다. 당장 똑딱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짧은 미팅이 끝났다. 그리고 나와 정당의 긴 인연이 시작됐다.

더 깊이, 제도권 정치 행위자가 되다

서명지를 전달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입당 권유를 받았다.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꿈꾼 적은 없었지만, 막상 권유받으니 고민이 되었다. 만약 그곳에 들어간다면 나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정치를 하면 소위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곳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문제였다. 여러 날에 걸친 고민 끝에, 한 정당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치인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에서 ‘좋은 세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특권이 아닌가. 또 내가 속한 정당의 방향성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적어도 내부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곳에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무 살 겨울,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정당이라는 곳에 가입했다. 당원으로서 나는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 때로는 선거운동원이었고 공천 재심위원이기도 했으며 한때 대학생위원장, 당 부대변인 등의 당직을 맡기도 했다. 정당 집회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고, 소모임을 꾸려 운영하기도 했다. 대학 내 정당 모임을 만들었고, 다른 정당 청년 조직이나 노동조합 등 외부 조직과 연대 활동을 하기도 했다. 내게 있어서 정당은 나의 삶, 나의 20대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정치인을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점점 더 제도권 정치에 발을 깊이 들여놓았다. ‘내부자’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해오던 것이니까, 늘 하던 대로 하자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정당에서, 제도권 정치에서 분주하게 살았다. 마치 직장인처럼 말이다.

정당인가, 인력사무소인가

정당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아니, 순탄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힘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선배들에게 늘 불러 다니고 행사에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선배들도 많았고 인간적으로나 정치인으로서나 존경할 만한 어른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 역시, (물론 어조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 행사와 선거에 우리를 동원했다.

선배들은 말했다. “나는 젊었을 때 의자부터 나르면서 여기까지 왔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좀 행사 준비도 하고 의자도 나르고 그래야지”라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때도 있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든지 일을 도울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도 일을 많이 도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배들은 ‘어리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정말 미안한데 이날 행사 좀 도와줄 수 있어?”라고 미안해하며 부탁하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거의 대다수는 “내일[평일] 낮 행사에 대학생위원회 애들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노?” “내일 행사에 주차 안내 봉사할 대학생위원회 애들 좀 데리고 온나”와 같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들은 나와 동료들의 일정이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좋은 정치룰 할 수 있게 ‘키워줄’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오로지 행사에 ‘젊은 애들’을 ‘자봉(자원봉사)’으로 동원할 생각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당직을 맡아 일하던 시기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매일 와서 얼굴 비추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에 네 책상이라도 하나 생기지 않겠니.” “나도 00년도에 처음 당에 와서 전당대회장 의자 나르는 것부터 했어.” 이리저리 불러 다니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 나를 위로를 한다고 했을 그 말이, 자신이 했으니 나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희망고문하는 말로 들렸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다. 가끔 통화를 하거나 함께 술 한잔 할 때 우리는 비슷한 처지의 삶을 털어놓았고, 자주 울분을 터뜨렸다. “하... 이게 맞냐?”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린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건데, 마치 인력사무소에 온 것 같았다.

어떻게 될진 몰라도 ‘그것’보다는 나은 무언가를 꿈꾸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선배들에게 불러 다니면서도 약간의 변명과 거짓말을 섞어 ‘동원을 회피하는 스킬’이 늘었고 불만은 있었지만 변할 방도가 없는 정당 문화에 그럭저럭 적응했다. 서로를 동원하거나 동원되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따금 불만을 털어놓으며 후일을 도모하고자 다짐하기도 했다.

익숙해졌기에 ‘할 만 하겠다’고 느꼈던 때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속 해도 괜찮을까?”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앞으로 대략 최소 30년, 길면 50년 이 일을 하게 될 터였다. 선배들이 부르면 달려가고, 의자를 나르고 주차 안내를 하는 등 ‘자봉’을 자처하고, 다른 누군가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모르긴 몰라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보좌진이나 시의원, 아니면 당직자와 같은 정치권을 공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사는 데 큰 지장 없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삶에 괜찮은 일인가? 타성에 젖어 정치권에서 관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게 그리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7년 동안 경험한 정당은 좋은 정치인을 육성하는 곳이 아니었다. ‘잘 동원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주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낙인과 배제가 엄습하는 곳이었다. 선거철에만 청년을 내세우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기 전까지

“청년 파이팅”, “청년이 미래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정말 좋은 뜻을 품고 정치를 해보려는 청년들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대신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7년간 몸담아 온, 한때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정당을 떠났다. “무슨 당 김민재입니다”라고 소개하던 수식어가 사라졌다. 나는 그냥 내가 되었다. 당을 떠나며, 나는 나의 도전과 좌절의 경험을 어떻게든 남겨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정당 밖에서 좋은 정치를 꿈꾸는 이들과 뭐라도 해보아겠다고 생각했다.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도전과 좌절의 경험이 휘발되기 전에 다음 도전자를 위해 무언가 남겨두고 싶었다. 적어도 실패하더라도 발자국은 남지 않겠는가. 오래전 동료들과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처럼, 정치라는 ‘3D 업종’에서 버텨 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한 자신감도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한 몫 했다.

나는 지금 ‘정치싱크탱크벨리드’라는 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정치의 ‘팍팍함’과 ‘매정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동료 시민에 대한 다정함과 ‘정치적 존재’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려는 새로운 정치가 가능성과 현실성을 가진, ‘실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토론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정치를 떠났지만 떠나지 못했고, ‘남고 지쳐서’ 여의도라는 섬에 모든 것을 두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전부 두고 오지는 못한 셈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길의 끝에 다다를지, 아니면 새로운 이정표를 마주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결과값이 무엇이 되었든, 적어도 지금 정치보다는 나은 정치,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간다. 그곳에 두고 온 동료들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돕는 연구, 돕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꿈꾸면서.

東動

‘동동’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청년 모빌리티 연구사업단이 연3회 (4월, 8월, 12월) 발행하는 웹진입니다. 신진 연구자를 포함한 필진의 글을 게재하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분석적 관점을 공유합니다.

※ 필자의 글은 본 연구사업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발행인: 김백영 편집·디자인: 다무라 후미노리, 손명은
표지 사진: 홋카이도 삿포로 히쓰지가오카 전망대의 W.S.Clark 박사 동상